
6.25와 사상전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6 · 25와 사상전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I. 문제 제기

6·25전쟁은 세계 전쟁사 중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쟁이었다. 군인들의 전사자도 많았지만 전선이 아닌 후방 마을의 개울가, 우물, 방공호 등 곳곳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의 시신들이 집단적으로 발견되었다. 군인들이야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수많은 전사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투도 없었던 후방 마을 곳곳에서 그렇게 많은 시신이 발견된 것일까? 누구의 시신일까? 누가 죽인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는 6·25전쟁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없고, 전쟁의 반쪽만 아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6·25전쟁에 대해 주로 ‘군사적 충돌 측면’에서만 이해해 왔다. 학교에서도 북한의 남침, 유엔군 참전, 낙동강 전투, 인천상륙작전, 38선 통과 북진, 중공 참전,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1·4후퇴, 휴전 등을 주로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 6·25전쟁의 ‘사상적 측면’(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간의 사상·체제 전쟁)이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사상사적 측면에서 6·25전쟁을 정의하면,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이 소련과 중공(중국 공산당)의 지원 아래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대한민국을 적화(공산화)하기 위해 일으킨 체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체제’라고 부르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 등을 착취하는 나쁜 체제’라고 혐오한다. 또한, 자본가, 지주 등 부자들과 경찰, 군인, 우익인사 등 반공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세력을 ‘반동분자’라고 매도하면서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러시아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 동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공산화하는 과정에서도 ‘반동분자 숙청’이라는 명분으로 부자들(자본가, 지주 등)과 반공세력을 학살하는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다.

6·25전쟁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남한의 반동분자들을 제거하고 인민들을 해방해야 한다’라는 공산주의 관념에 따라 일으킨 전쟁이었다. 따라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을 때 지주, 자본가, 경찰, 공무원, 민간우익 등 우익세력들을 학살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었다. 실제 김일성, 박헌영 등은 전쟁 발발 당시 남한 내에 있는 좌익세력의 도움을 받아 반동분자를 숙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 남침 전쟁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때 그는 서울만 점령하면 20만 남로당원 등 좌익세력의 협조를 받아 손쉽게 공산화할 수 있다고 스탈린을 설득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이 남한 각 지역을 점령했을 때 남한 좌익분자들과 합세하여 우익 민간인들을 살생부에 따라 체포, 인민재판이나 무단으로 학살했다. 인천상륙작전(1950.9.15)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그간 체포해 두었던 민간우익인사들을 집단학살하고 후퇴했다.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되찾은 것은 인천상륙작전 13일만인 9월 28일이었는데, 이즈음 북한군은 각지에서 자행하던 집단학살을 멈추고 재빨리 북으로 후퇴했다. 북한군이 후퇴하자, 그간 북한군을 도왔던 남한 좌익분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인근 산으로 피신, 빨치산이 되어 지역주민들 중 자신들을 고발할 위험성이 있는 기독교인, 우익인사들의 가족 등을 집단학살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6·25전쟁 때 후방마을에서 일어난 잔혹한 민간학살극의 주체는 남한 마을을 점령했던 북한군과 이에 앞잡이 노릇을 한 남한 좌익분자들이었다. 북한군이 마을에 내려오자, 각 마을에 있던 좌익분자들은 북한군을 환영한 후 합세해, 완장을 차고 북한 앞잡이로서 반공세력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다. 그간 한마을에 살던 이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나자, 돌변하여 북한군과 합세한 것이다. 6·25전쟁을 겪은 분들이 한결같이 좌파사상을 가진 이웃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북한군이 내려오는 등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돌변하여 북한군과 한편이 되어 우익주민들을 죽이는 악마로 돌변하더라는 것이다.

북한군 점령기간(1950.6월말-9월말)에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에 의해 일어난 학살, 북한군 후퇴 직후에 남한 좌익분자들에 의해 일어났던 민간인 집단학살극은 너무나 참혹하고, 그 규모도 크다. 학살의 규모는 자료들에 따라 다른데, 6만여 명, 12만여 명, 16만여 명 등 다양한 자료와 주장이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나 미군이 주로 했고, 좌익은 피해를 입은 세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이는 좌파진영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일부 사건을 왜곡되게 선전하는데다 우파진영은 이 분야 진실개기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로, 6·25전쟁의 대표적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노근리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미군이나 한국군 혹은 경찰에 의한 사건만 부각되었고, 북한군과 동네 좌익분자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공론화되지도 못했다. 그 결과, 후방 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었고, 6·25전쟁의 성격도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에 대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려면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알아야만 한다.

II. 해방 이후 좌우간 사상갈등에 기인한 사건들

우리 민족에게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918년(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이다. 러시아에서 레닌의 10월혁명(1917.10)이 성공한 직후이다. 당시 한민족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주체였고, 국내로 전파한 것은 1920년초였다. 1920년대초 국내에 좌익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커지자, 일제가 치안유지법(1925)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통제했고, 이로 인해 좌익세력은 상당히 억제되었다.

해방 직후에 한반도에서는 공산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직후 통치권 공백기를 이용하여 발빠르게 대응하여 좌익세력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다. 하지 중장 등 미군은 9월 9일에서야 서울에 들어와 미군정을 수립했기 때문에, 25일간의 통치권 공백현상이 발생했다. 좌익세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조선공산당을 조직한데 이어 발 빠르게 건준(건국준비위원회), 인공(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준통치조직을 만들어 좌익세력 확장 및 통치권 장악에 나섰다. 더욱이 미군정도 좌익세력에 대해 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좌익세력은 그 확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도 속속 우익인사들이 들어왔다. 이승만은 10.16 귀국했고, 김구 등 임시정부 인사들도 11.23, 12.1 두 차례에 걸쳐 귀국했다. 이들은 귀국 후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등 우익단체들을 만들어 결집시키고 국민계몽활동에 나섰다. 또한 모스크바삼상회의(1945년 12월말) 직후인 1946년 1월부터 우익은 반탁운동을 했으나 좌익은 반탁을 하다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선 탓으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갔다. 특히 좌익세력은 궁지에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46년 5월 조선정판사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공산당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인쇄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미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박헌영은 미군정에 대해 대결을 선언하는 “신전술”(7월)을 발표했다. 그는 미군정이 체포령을 내리자 8월 몰래 장례식으로 위장하여 관속에 숨어 월북했고, 북한에 있으면서 남로당에 지령을 내려 사회를 혼란시킨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1946년 9월 총파업과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10·1대구폭동사건이다.

9월총파업은 남로당이 산하의 좌익노동단체인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고문 김일성, 박헌영, 모택동, 회원 50여만 명)을 통해 파업을 일으킨 사건으로, 철도노동자(4만 명) 총파업에서 출발하여 전신, 체신, 출판 등 주요 산업으로 확산(25만 명)하여 사회를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전국의 철도가 한 달 동안 운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로당세력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대구의 전평 등 좌익노동단체를 중심

으로 좌익민간단체, 좌익학생단체 등과 합세하여 10·1대구폭동사건을 일으켰다. 대구10·1폭동사건은 소련군,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사건이다. 폭도들은 경찰서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경찰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등 대구를 혼란에 빠트렸다. 이 사건은 대구시청 앞에서 “쌀을 달라”는 부녀자들의 시위 선동에서 시작했다. 이 시위가 폭동으로 비화한 계기는 대구의대 좌익학생 최무학이 대구의대 학생들과 함께 신원미상의 콜레라 병사자의 시신을 거리로 가지고 나와 경찰의 총에 죽은 희생자라고 선동한 시체시위였다. 시위대는 대구경찰서를 점령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들과 우익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반란군은 미군정이 진압해 오자, 경북 왜관, 영천, 성주, 의성, 안동 등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좌익세력과 함께 경찰서를 점령하여 경찰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이 폭동은 경북을 넘어 경남, 충남, 경기, 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이 사건으로 좌익세력은 많은 수의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살해함으로써 반공능력에 큰 타격을 주었고, 폭동 잔당들이 보복을 피해 인근 야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이들은 산사람, 야산대라고 불리고 훗날 빨치산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¹⁾

9월총파업과 10·1대구폭동사건은 소련군-김일성-박헌영 순으로 지령을 내리고 조선공산당(뒤의 남로당) 주도 아래 전평 등 좌익단체들이 합세한 폭동이다. 이는 미군정을 혼란에 빠트려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사상전이자 체제전쟁이었다.

미군정은 어떻게든 한반도에 자유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단일독립국가를 만든 후 떠나려 했으나,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소련군의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다.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 무산이 그것이다. 소련군은 미소공동위원회 때마다 임시정부 구성 문제와 관련, 찬탁을 주장하는 좌익세력만 참여시키고 우익들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다. 협상 실패 핵심요인은 소련군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남한의 우익세력 배제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소련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의 통일문제를 1947년 9월 19일 유엔으로 넘겼다. 유엔은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정하고(11.14) 이를 실행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했다(1948.1.8.). 서울에 도착한 한국위원단은 남북총선거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소련군이 거부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유엔은 소총회의 결의로,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소련군과 북한, 그리고 남로당은 남한의 반공정부 구성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장폭동을 기획했다.

이러한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 1948년 2·7폭동사건이며, 그 사건의 제주

1) 양동안, 『건국전후사 바로알기』(도서출판 대추나무, 2019), pp95-96.

도 판이 제주4·3사건이다. 이 사건은 북한과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제주 남로당책임자 김달삼이 주도해 일으킨 것인데, 폭동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제주도였다. 당시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 통제력이 약했고, 도민의 80%가 좌익계로 넘어갔다. 어린이 들조차도 남로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 폭동을 일으키기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다.²⁾

김달삼은 4·3 새벽 2시 봉화를 올리며 400여명의 무장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는데, 24개 경찰 지서 중 12개의 지서를 습격하여 다수의 경찰을 학살하고 무기를 탈취했다. 폭동군은 선거사무소, 투표소 습격, 선거공무원 학살, 전신선 차단, 유권자 투표방해 등 선거활동을 집중적으로 방해했으며, 이로써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북제주갑구와 을구)가 투표율 미달(43%와 47%로 기준 50%에 미달)로 무산되었다. 제주도에 국한해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 건국은 북한의 공작과 남한 공산세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제주4·3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4·3사건 직후 경찰이 수거한 인민해방군 포고령 전단지 에 따르면, “우리 인민해방군은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라고 하여 제주4·3폭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³⁾

제주 남로당은 제주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 투표를 실시했고,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등용 등 제주대표자들은 8.2 제주도를 탈출, 제주 주민들의 투표지 5만 2,000여 개를 가지고 서울을 거쳐 38선을 넘어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다.⁴⁾

제주4·3사건은 북한의 지령과 남로당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공산정권 수립을 측면 지원한 사건이었다. 남로당세력이 제주4·3사건으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71.6%의 투표율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김달삼이 월북한 후 제2대 사령관이 된 이덕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끌어들이 한라산을 근거로 수년간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로써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희생자를 냈고 그 중에는 무고한 희생자도 많았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본질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1월 23일 CNN방송에 출연해 잘 말해주었다. 그는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라고 해, 사건의 본질이 공산폭동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경의 진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 정당한 진압활동이 되는 것이다.

2) 이기봉, 『빨치산의 진실』(도서출판 다나, 1992), pp220.

3)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07), pp83.

4)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07), pp193-194.

III. 6·25전쟁 초기 한국 정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 논란

1. 이승만 정부의 좌익세력 경계 배경

6·25전쟁 초기, 이승만정부가 민간인을 학살한 보도연맹사건을 이해하려면 이승만정부의 좌익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건국(1948년 8월 15일)된 후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에서 지창수 상사 등 좌익 군인들이 제주 빨치산 토벌을 위해 출동하던 날 밤 출동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지창수 상사 등은 “남북통일을 위해 인민군으로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창수 상사, 김지회 중위 등 40여 명의 주동 반란군들은 동조를 거부하는 장교, 하사관 등을 즉결 처형하고 무기고를 탈취하여 겁먹은 3,000여 명의 장병들을 이끌고, 부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간좌익인사들과 합세하여 여수로 진격했다. 반란군들은 새벽 4시경 여수경찰서를 점령하여 수십명의 경찰들을 학살하고, 우체국 등 관공서들을 차례로 접수했다.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내걸었다. 반란군들은 집집마다 담벽에는 “인민군은 38도선을 돌파하여 서울 점령을 목표로 남진 중에 있다”는 등 거짓 선동벽보를 붙였다.

10월 20일 1개 대대는 여수에 남고, 2개 대대는 순천을 접수하기 위해 떠났다. 반란군은 전남 동부의 여수, 순천에 이어 광양, 보성, 벌교 등 6개 시·군을 장악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관청들을 접수한 후 인공기(북한기)를 게양하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산행정을 실시했다. 반란군들은 동네 좌익분자들을 앞장세워 우익인사 색출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동네 좌익분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그리고 우익인사들을 체포해 왔고, 반란군들은 이들을 ‘반동분자 숙청’ 명분 아래 인민재판이나 무단 처형을 감행했다. 여수14연대반란사건으로 생긴 피해 규모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1949년 1월 10일 기준으로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망 3,392명, 중상 2,056명, 행방불명 82명 등 총 5,530명이다. 이 규모는 아마도 반란군에 의한 피해로 추정된다.⁵⁾ 여수에는 8일간 1,200여 명, 순천에는 4일간 1,134명 등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피살자가 나왔는데, 이는 동네 좌익분자들이 반란군에 협조하여 동네 집집마다를 수색하며 우익세력을 체포, 학살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10.20 오후 3시 여수시 중앙동 로타리에서 4만 명을 모아 놓고 인민대회를 열었는데, 이 때 지창수 상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수 인민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승만 일당의 주구 노릇을 하던 경찰과 친일파, 그리고 모리 간상배 등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소탕해야 합니다. ... 혁명에는 본래 사정(私情)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국하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사건 조사연구보고서(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35.

는 마음으로 이런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혁명과업 완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⁶⁾

중앙동 로타리에서는 인민재판이 매일 열렸는데, 10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린 인민재판에는 경찰, 우익인사 등 800여 명이나 판결을 받았다. 사형언도가 내려지면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했다. 처형방법은 잔인하여 죽창, 총검, 몽둥이 등으로 학살했고, 특히 경찰이 잡히면 구타 후 처형당하고 여순경을 신체를 절단하거나 훼손한 후 학살하였다.⁷⁾ 이렇듯, 여수와 순천에서 엄청난 우익인사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난 것은 그 동네 출신 좌익분자들의 앞잡이 노릇 때문이었다.

반대로, 구례의 경우는 반란군이 단 한 명도 살해하지 않고 10시간 만에 곱게 자진 철수했는데, 주된 이유는 반란군에 동조, 협조하는 자가 없어 반동분자를 색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⁸⁾ 결국 학살자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는 그 마을에 북한군에 협조하는 좌익분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달린 문제였다.

정부는 여수14연대반란사건 발생에 대해 급히 진압군을 조직하여 8일 만에 진압을 완료했다. 국방부의 발표(11.10)에 따르면, 국군에 의한 진압과정에서 반란군 363명이 사살되었고, 반란군 혐의자 2,817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그중 410명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군도 61명이 전사했다.⁹⁾

또한, 반란군 잔당 1,000여 명은 진압군을 피해 지리산 등 산악으로 들어가 빨치산(좌익 무장 유격대)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이들의 반정부투쟁 내용을 소재로 한 소설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다.

여수14연대반란사건을 통해 이승만정부는 좌익세력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군내 좌익들의 실상을 보고받고 충격을 받은 후 로버츠 미군사고문단장을 불러 “당신네가 국방경비대를 만들면서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바람에 군내부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소.”라고 질책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반체제세력의 위험성을 깨닫고 국가보안법을 제정(1948년 12월 1일)해 좌익세력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49년부터 군 내부의 좌익 군인들을 제거하는 숙군작업을 전개했다. 숙군작업의 결과, 좌익군인으로 드러난 4,749명을 제거했고, 수사 중 탈영한 군인은 5,568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총수는 10,317명로서, 육군총병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력이 군내부에 침투한 좌익 공산세력이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정부는 1949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남로당세력을 뿌

6) 김학유, 『1948년 여순봉기』(역사비평사, 1991), pp259. (박윤식, “여수14연대 반란(여수순천사건)”, 도서출판 휘선, 2012.에서 재인용)

7) 박윤식, 『여수14연대 반란(여수순천사건)』(도서출판 휘선, 2012), pp41.

8) 이기봉, 『빨치산의 진실』(도서출판 다나, 1992), pp250.

9) 박윤식, 『여수14연대 반란(여수순천사건)』(도서출판 휘선, 2012), pp60.

리 뽑는데 전력을 다했다. 나아가 정부는 좌익성향 인물들을 전향시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며, 군은 1949년 겨울을 이용하여 지리산, 백운산, 회문산 등 산악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빨치산도 대거 토벌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점은 여수14연대반란사건을 계기로 1949년 동안 남한 내부의 좌익 세력을 소탕한 후에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시 동조 반란을 막고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이란 이승만정부가 1949년 조직한, 좌익에서 전향한 인물들로 구성된 우익 단체이다. 그런데 이 보도연맹 회원들은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오자, 언제 전향했느냐는 듯 좌익분자로 되돌아가 북한군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950년 7월 16일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풀려났다. 북한 경찰(내무서 지칭)이 보도연맹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난 좌익 수와 보도연맹원들이 난폭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¹⁰⁾

이렇듯, 6·25전쟁이 일어나 북한군이 서울과 인천 등을 점령하자, 전향하지 않은 좌익분자들뿐만 아니라 전향을 선언했던 보도연맹원들도 북한군을 환영하고 북한군에 협조했다. 이들은 경찰 등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는 데도 앞장섰다.

이에 정부는 좌익 전력자들의 북한군 협조 사태를 우려하여, 계엄령(제13조)에 근거해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을 제정(7.12), 예비검속을 단행했다. 당시 예비검속에 대한 자세한 법령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민주신보>의 예비검속 관련 보도(1950.8.4.)¹¹⁾나 1951년 정부가 만든 예비검속 관련 공문서¹²⁾ 내용을 고려할 때, 이승만정부의 예비검속의 목적이 집단 처형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¹³⁾ 오히려 예비검속의 1차적 목적은 이들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을 경찰서 유치장, 형무소 등에 가두어 두는 것이었다.

예비검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 첩보기관(CIC), 사찰경찰 등이 예비검속한 사람들 중 일부를 집단 처형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북한군이 경남 진주 등으로 진격해오자

10)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푸른역사, 2006), pp43.

11) 민주신보 보도(1950.8.4)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장이 기자에게 “시국에 비추어 부득이 일부 맹원을 예비검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호전되면 곧 석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2) ① 1951년 2월 3일 계엄사령관이 각 지청장에게 보낸 예비구금 관련 문건에서는 ‘경찰이 예비구금을 할 때 인권을 경시하지 말 것, 엄정 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 있다. ② 1951년 12월 8일 계엄사령관이 빨치산 토벌부대인 백선엽 백야전투사령관에게 보낸 공문서에도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통비(적과 내통)할 우려가 현저한 자를 공비와 격리하기 위함’이며 ‘범죄로 인한 구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 있다.

13)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역사비평사, 2002), pp320-324.

극심한 공산화 공포에 사로잡힌 가운데, 전쟁 초기 대응 기준과 매뉴얼 부족, 사상검증 능력이 부족한 군과 경찰의 무리한 조치¹⁴⁾ 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처형은 충북 이하 남쪽에서 주로 일어났는데, 진주 등 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산 등 경북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좌익세력과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학살의 규모에 대해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수만 명 이상이라는 주장들이 많다.¹⁵⁾ 2009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서는 “6·25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 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3. 6·25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학살 논란, 노근리 사건

6·25전쟁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근리 사건'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은 노근리사건을 반미 선전 선동 소재로 많이 활용했었다. 이후 수면 아래 있다가 1990년에 와서 친북 성향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미국 시카고대)가 왜곡이 심한 북한 자료를 근거로 처음 연구하였고, 그 내용이 1994년 한국에도 알려졌다. 나아가 1999년에는 AP통신의 보도를 통해 세계적인 이슈로 확산되었다. 이후 국내 좌파세력이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하면서 커다란 역사적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노근리 사건이란 1950년 7월 말 미국 1기병사단 소속 부대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인근 경부선 철로 위에서 전투기에 의한 포격과 기관총 사격, 쌍굴다리에 모인 피난민들을 향한 총기 사격등을 통해 다수의 사상자(300-400여 명 설, 확인자는 182명)를 낸 사건이다.

그렇다면, 미군은 왜 갑자기 피난민들을 공격했을까?

당시에는 민간인 복장을 한 북한군이 피난민 속에 숨어든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들은 미군을 공격하거나 탄약과 무기를 수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는 피난민 통제에 골치를 앓았다. 미군 부대의 7월 24일 자 전투일지의 내용은 이렇다.

“피난민 통제는 어려운 문제였다. 누구도 무고한 인민을 사살하길 원치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 흰옷을 입은, 피난민으로 보이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은 달구지로 탄약과 중무기를 나르고 등에는 군사 장비를 짊어진 북한 군인들로 밝혀졌다. 그들은 자주 군복에서 민간인 복장으로, 다시 민간인 복장에서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목격되었다. 조사가 불가능한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다. 흰옷 입은 한 남자가 여인과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여인은 임신 중이었다. 조사를 하자 여인은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역사비평사, 2002), pp188.

15)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역사비평사, 2002), pp188.

그러나 임신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형 라디오를 옷 속에 숨겨 가던 중이었다. 제1기병사단 지역의 민간인들과 피난민들은 엄격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사단은 이들의 이동은 낮 10:00~12:00에만 허용되며 어떤 소달구지, 트럭, 민간인 차량의 도로 운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령하였다.”¹⁶⁾

북한군의 노근리 현지 보고 자료에도 “전진하는 인민군의 공격과 후방 빨치산의 대담한 작전에 의해 적(미군 의미) 퇴로 차단과 결합으로 포위 섬멸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당시 미군이 인민군복을 입은 군인과 민간인 복장을 한 빨치산의 협공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렇게 볼 때, 미군이 피난민을 공격한 이유는 이들을 민간인 복장을 한 공산 게릴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전투 초기 참전했던 미군의 미숙함도 일조했다. 이들은 전투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전해 당황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혔고, 미군끼리 교전하는 등 오판도 많았다.

IV. 북한 점령기, 북한군과 남한 좌익 세력에 의한 양민 학살 문제

1. 북한 정권의 양민학살 지시 근거

김일성이 남침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함이었다. 공산화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한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지식인을 타도해야 하는데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반동분자 숙청’이다.

김일성도 전쟁을 개시하면서 수시로 ‘반동분자 숙청’이라며 우익세력 척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다름 아닌 학살 지시였다. 김일성은 6·26 방송을 통해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져야 한다. 도피분자, 요언(妖言) 전파 분자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밀정 및 파괴분자를 적발, 가차 없이 숙청하고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라고 했다.¹⁸⁾ 남침 직후 서울 시내에 뿌려진 김일성의 호소문에도 “반동분자, 비협력분자, 도피분자를 적발하여 ‘무자비’하게 숙청하라”¹⁹⁾라는 문구가 있었다. 1950년 6월 30일 발표한 포고문에도 “국군 장교와

16)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9), pp331-332.

17)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9), pp332.

18) 『남북한 관계 사료집(22권)』(김필재,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및 左翼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 코나스넷,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19) 전라북도 경찰국, 『꽃피는 산하 - 6·25의 흔적을 찾아서』(전라북도 경찰국, 1980) (김필재, “한국전쟁 시기

판·검사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면장, 동장, 반장 등은 인민재판에 부친다.”라고 했다.²⁰⁾ 부수상 겸 외상인 박헌영도 1950년 7월 1일 “반역자들을 체포, 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줄 것”을 선동했다. 1950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에서 발표한 김일성의 보고에 따르면, “악질 반동에 대해 복수하려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입니다.”²¹⁾라고 했다.

이러한 각종 자료를 볼 때도 북한 정권 기관(북한군, 국가보위부, 내무서 등)과 민간 좌익 공산세력에 의한 민간 우익세력의 학살은 예정된 것이었다.

2. 인천상륙작전 이전 북한군 점령 지역의 민간인 학살

북한군은 전쟁 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7월 말에는 경상남·북도 일원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를 장악했다. 북한군은 점령 후 인민위원회(행정 조직), 내무서(우리의 경찰서)와 치안대(마을 치안조직) 등 통치조직을 만들고 동네의 좌익분자들을 동참시켰다.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이 행한 악행은 우익인사 학살, 의용군 징집, 유력인사 납북 등이었다.

북한군은 남한 좌익분자들을 앞세워 경찰, 군인 가족, 지주, 자본가 등을 반동분자로 지목하여 살생부 명단을 만들고, 가가호호 수색하여 이들을 체포한 후 인민재판, 무단 처형 등을 통해 학살했다.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라고 증언하곤 한다. 이는 북한군보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좌익분자들이 더 큰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군은 7월 부산 점령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호남지역에 군병력을 거의 주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민간좌익세력이 동네를 완전 장악했고, 그들에 의해 엄청난 학살극이 일어났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겪은 한 경험자의 증언을 들어보자.²²⁾

“동네에 한 50-60명 어린애들이 죽창을 어깨에 딱 걸치고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르고 다녔지. 어렸으니 좌파고 우파고 뭐 알았겠나? (빨치산) 꺾기대회 때 구덩이를 파놓고 세 사람 세워놓고 ”반동은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크게 묻는거야. 전부 ”예“라고 하니 죽창으로 찌르고 발로 차 넣었어. 왜 그랬냐고? 뭐, 지주들이 죽어 없어져야 땅을 걷어 무상분배할 수 있다던가...”

인민군 및 左翼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 코나스넷,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20) 『정치범은 자수하라』·『반동분자 처리지침』(김필재,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및 左翼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 코나스넷,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21) 신일철, 『한반도 분단의 재인식』(나남, 1993) (김필재,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및 左翼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 코나스넷,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22)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나와 6·25』(도서출판 기파랑, 2010), pp64-65.

서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승종 전 국무총리는 당시 고려대 교수였는데, 체포돼 납북될 위기에 처했으나 구사일생으로 도피에 성공했다. 그의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당시 서울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신 남한 곳곳에 숨어있던 공산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출소를 점령하고, 남한에 있던 자본주의 세력들을 찾아내고, 젊은 남자들을 공산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동네방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공산군 앞잡이들이 우리 집 문도 두드렸고 나도 끌려나갔다.”²³⁾

북한군과 남한 좌익세력은 반동분자로 지목한 사람을 처형할 때도 매질 후 총으로 난사하거나, 죽창으로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사지를 절단해 죽이거나, 칼로 얼굴을 난사하거나, 차에 매달아 죽이거나, 산채로 구덩이에 묻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했다. 서울법대 58학번으로 서울에서 원주 고향으로 가면서 온갖 경험을 했던 김기수씨는 “그들의 이런 잔인성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되물은 후, 일찍이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듯이 공산주의 본성과 본질에서 나온다고 이해했다.²⁴⁾

북한군은 남한 점령 3개월 동안 남한의 인력을 총동원하는 정책을 폈다.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은 젊은 청년들을 선전·선동하거나 강제로 체포해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에 투입했는데, 이를 의용군이라고 했다. 그 규모가 15만 명에 이르렀는데, 훈련도 없이 전선에 투입되어 상당수가 총알받이로 희생되어 낙동강을 피로 물들였다. 북한군에 강제로 징집되어 총알받이가 된 의용군의 죽음도 학살당한 사례에 포함될 수 있다.

강제로 징집된 남한 주민들은 낙동강 전선에 의용군으로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약·식량의 보급품 수송, 교량·도로 보수 공사, 진지·참호 구축, 정찰·간첩 임무 등에도 투입되었다. 이렇게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보충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북한군이 징발한 민간인 규모는 60만 명에 이르렀다.²⁵⁾ 이들은 북한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의 폭격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희생도 민간인 학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낙동강에서 죽은 청년들의 죽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보급인력으로 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희생도 그렇다. 인민위원회 등 북한군의 앞잡이가 되어 이들을 체포하여 전쟁터로 보낸 부역자, 동네 좌익분자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동네에서 한 그들의 책임을 한 번도 제대로 거론해 본 적이 없다.

서울 점령 3개월 동안 북한군은 8만 명이나 되는 유력 인사들(정치인, 학자, 교사, 예술가 등)을 체포해 납북했다.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3월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납북자가 82,959명으로 나타나 있다.²⁶⁾

23) 월간조선, 『60년전, 6·25는 이랬다』(월간조선사, 2010.6월호), pp149.

24) 이하우·최명, 『6·25와 나(서울법대 58학번들의 회고담)』(까치글방, 2010), pp43.

25) 남정옥, 『6·25전쟁의 재인식과 이해』(전쟁기념관, 2014), pp172-174.

이름과 주소가 확인된 숫자만 82,959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랍자가 116만 8,849명이라는 통계도 있다.²⁷⁾ 이들 중에는 정치인이 많았는데, 제2대 국회의원 210명 가운데 원세훈, 안재홍, 조소앙 등 27명이 납북되었고, 특히 제1대 국회의원(제헌의원)은 200명 가운데서 50명이나 납북되었다.²⁸⁾

인천상륙작전 직후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은 이들을 철삿줄로 두 손을 묶은 채로 미아리 고개를 넘어 강제 압송했는데, 그 납북자 일부를 평양 등 곳곳에서 학살했다는 주장들도 있다. 이들을 직접 학살한 것은 북한군이지만 이들을 각 마을에서 체포하는 데는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체포한 것도 결국 그 마을 좌익분자들인 것이다. 8만명이 넘는 납북자 피해도 마을 좌익분자들이 그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

3. 인천상륙작전(9월 15일)과 서울 수복(9월 28일) 이후 민간인 집단학살

6·25전쟁 동안 공산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인천상륙작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이전에는 인민재판 등을 통해 ‘반동분자’로 지목된 경찰, 공무원, 지주 등 우익인사들에 대한 ‘선별적 학살’이 일어났고, 인천상륙작전 이후부터는 무차별 ‘집단학살’이 일어났다.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집단학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체포했던 우익인사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후 철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군이 후퇴한 이후에 남은 남한 내부의 좌익분자(빨치산 활동)들이 지역주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경우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다급해진 김일성은 9월 27일 일시적·전략적 철수 명령을 내렸고, 북한군은 앞다투어 후퇴의 길에 올랐다. 이것이 남·북한의 주민들에게 피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북한군은 후퇴하기 전 전국적으로 체포해두었던 우익인사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미 1950년 9월 20일 전선사령관 김책(金策)은 우익 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도록 지령을 내린 바 있다.²⁹⁾ 이에 따라 26일에서 30일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다.³⁰⁾ 북한군은 대전형무소 6,000여 명, 전주형무소 1,000여 명 등 주요 형무소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산재한 내무서(남한의 경찰서)에 체포해두었던 우익인사들을 학살한 후 퇴각했다. ‘반동분자’들을 제거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¹⁾

26) 정진석, 『납북』(기파랑, 2006), pp32-33.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pp760. (정진석, 『납북』(기파랑, 2006), pp21.에서 재인용)

28) 정진석, 『납북』(기파랑, 2006), pp21-22.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22.

30) 이때 시작된 북한군의 후퇴 행렬은 북한지역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민간인 학살극도 북한지역으로 이어졌다. 국가보위부, 내무서, 북한군, 북한지역 내 좌익세력(공산당 등) 등 북한정권에 의한 북한지역 민간인 집단학살은 국군이 북진을 개시한 10.1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한 10.9경부터 더욱 심화되었다.

31) 연정은, “북한의 남한점령시기 ‘반동분자’ 인식과 처리,” 서중석 외 6인공저, 『전쟁속의 또 다른 전쟁』(신언, 2011), pp302-304. (한화룡,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 전쟁의 그늘”(포앤북스, 2015)에서 재인용)

그러나 북한군이 퇴로가 막힐까 우려하여 급박하게 후퇴하는 바람에, 처형을 면하고 살아난 사람들도 많았다. 인천상륙작전과 신속한 서울수복으로 인해, 급박하게 전세가 역전되고 북한군이 급속히 와해되는 바람에 아군과 민간인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아군 병력 14만 명과 국민 200여만 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³²⁾ 유엔군과 국군이 낙동강전선에서 서서히 육상으로 북한군을 밀어 올렸을 경우, 아군병력 14만 명과 국민 200여만 명의 희생을 더 낳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북한군의 저항으로 더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을 것이고, 북한군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후퇴했을 것이기 때문에 동네 민간인들을 더 많이 납북하거나 학살하고 떠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들의 집단학살극은 주로 9·28서울수복 이후 10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북한 점령 당시 북한군을 도왔던 좌익분자들은 북한군이 철수하자 혼돈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들은 유엔군과 국군, 경찰이 돌아올 경우,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부터 직접 보복을 당하거나 군·경에 신고하여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악행을 증언하거나 보복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에 나선 것이다.

당시 빨치산 활동을 했던 김서용 씨는 9·28서울수복 이후 일어난 집단학살에 대해 “미군이 오면 우익 가족들이 보복할 것을 우려해 다 죽이기로 했다.” “빨치산들은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다. 갓난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증언했다.³³⁾

이 시기에 일어난 참혹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실상은 2002년 월간조선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1952)를 찾아냄으로써 드러났다. 이 명부에 피살자의 이름, 지역, 학살 일자, 발견지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9·28 이후 좌익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집단학살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명단의 5만 9,964명의 피살자 중 전남이 72.6%(4만 3,511명)에 이르렀고, 전북까지 포함하면 83%에 이르렀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 영광군이었다. 학살된 자가 2만 1,225명이었는데, 이중 2,500여 명이 10세 미만이였다. 이는 보복을 막기 위해 가족 단위로 집단학살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학살 피해자의 규모는 “6·25사변 피살자 명부”(59,964명)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³⁴⁾ 명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통계연감(1952.10)에는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에 의한 민간인 피살자를 12만 8,900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정일권 장군의 수기 “6·25 비록”에는 16만 5천여 명이 학살(서울에만 9,500여 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53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발간한 “1952년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122,799명)과는 별도로 민간인 사망자 236,475명, 행방불명 298,175명 등을 수록한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193.

33) 월간조선사, 『6·25피살자 59964명』(공보처 통계국, 2003), pp26.

34) 월간조선사, 『6·25피살자 59964명』(공보처 통계국, 2003), pp14-16.

점을 고려할 때 학살의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⁵⁾

4. 이승만 정부, 북한군 후퇴 시기(인천상륙작전-서울수복) 양민학살 대응조치

인천상륙작전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부역자들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역자들이란 북한군 점령통치 하에서 인민위원회 등 북한 점령 통치에 적극 참여하여 우익세력 학살, 의용군 징집, 유력 인사 체포·납북 등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말한다.

먼저 이승만 정부는 인천상륙작전에 성공(9.15)하고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 점령기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복감정을 가지고 북한군 협조자들을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학살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3일 뒤인 9월 18일, 사형(私刑) 금지법을 가결했다. 뿐만 아니라 육군본부도 서울수복을 3일 앞둔 9월 25일, 민간인에 대한 사적인 가해를 금지하는 훈령을 발표했다. 군인들이 사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울을 수복한 9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탈환 지역에서의 사적인 원한에 의한 타살, 구타, 구금 등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나 가족들이 사적으로 보복조치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10월 13일 부역자 처리법을 확정하고 가결했다. 이것은 북한군 점령기 3개월 동안 북한군에 협조해 우익세력 학살 등을 저질렀던 부역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대응조치는 더 큰 학살극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군은 항복하는 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교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V. 북진 시기(1950년 10월), 북한에서의 양민학살 실상

1. 후퇴하던 북한정권의 북한주민 집단학살극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고 국군은 10월 1일부로, 미군은 10월 9일부로 38선을 통과하여 북진을 시작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전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시신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신들이 발견된 지역은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

35)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9), pp254-255.

도, 강원도 등 북한 전역이었다. 시신들이 집단으로 발견된 장소는 교화소(감옥), 정치보위부, 내무서, 동굴, 터널, 방공호, 공동묘지, 우물, 개울, 저수지, 바다 등 다양했다.

북한 지역에서 대표적 집단학살 지역은 함북 함흥으로, 2만여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함흥지역 집단시신 발견 장소로는 함흥감옥 700여 구, 총령탑 지하실 200여 구, 정치보위부 지하실 300여구, 함흥 북쪽 덕산 니켈 광산 6,000여 구, 함흥 뒷산 반룡산 반공굴 8,000여 구 등이었다.³⁶⁾

함북 함흥뿐 아니라 함남 영흥(영흥 반공호 1520호 등), 평남 평양(칠골리 2,500여 구, 승호리 4,000여 구 등), 황해도 신천·재령(35,000여 구 등) 등 북한 전역에서 집단 시신이 발견된 곳이다.

북한군은 국군이 동해안에서 북진을 개시한 10월 1일에 퇴각하며 학살을 시작했다.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한 10월 9일 이후에는 대대적인 집단학살극을 벌였는데, 이들이 학살한 대상은 ‘반동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다. 반체제세력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는 목사 등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남한에서 납북된 인사들이나 국군 포로들도 있었다.

평양교화소(500여 구), 함흥교화소(700여 구), 원산인민교화소, 해주교화소 등 북한 전역에 산재한 교화소(형무소), 정치보위부 등에서 집단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평양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의 수기 <군과 나>에도 평양교화소에서 본 집단 학살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평양형무소를 들렀을 때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우물마다 시체가 가득하고 맨땅 곳곳에도 생매장한 시체가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았다. 적들은 납북 인사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를 모조리 학살하고 달아난 것이었다. 일대는 악취가 가득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³⁷⁾

북한지역에서는 교화소(형무소), 정치보위부 등 구금 시설뿐 아니라 공동묘지, 개울가, 저수지, 동굴에서도 민간인들의 집단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인민군이 후퇴하던 상황에서도 민간인들을 무차별 예비검속하여 마구잡이로 처형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 정권이 국가보위부 주도로 내무서(경찰서)에 예비검속과 처형을 지시한 결과였다. 내무서는 장차 들어올 유엔군과 국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색출, 검거하여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이때, 지역 사정과 인물들의 사상을 잘 아는 동네 좌익분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북한정권은 이렇듯, 지역 내 좌익분자들의 협조를 받아 반공 우익세력들을 대거 학살한 후 북으로 후퇴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이 떠나고 유엔군과 미군이 점령하자

36) 박계주, 『자유공화국 최후의 날』(정음사, 1955), pp78. ; 박남식, 『실락원의 비극』(문음사, 2004), pp169-172. (한화룡,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 전쟁의 그늘』(포앤북스, 2015)에서 재인용).

37) 백선엽, 『군과 나』(시대정신, 2010), pp129.

“여태까지 세도를 부리던 빨갱이는 온데간데없고 집집마다 남은 것은 곡성뿐이다.”라고 탄식했다.³⁸⁾ 북한군이 후퇴한 후, 우익인사들은 치안대를 구성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반공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11월 말 중공군이 공격을 개시하고 12월 초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를 시작했다. 북한 정권은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던 반공 우익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지역의 반공우익세력은 후퇴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따라 남으로 대량 탈출에 나섰다. 유엔군이 함경남도의 흥남부두를 통해 철수 작전을 전개하자, 인근 북한 주민들 30여만 명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어 “배를 태워주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알몬드 군단장 등 미군지휘부는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 다량의 폭탄과 휘발유 등 전쟁물자들을 부두에서 폭파하고 그 빈공간에 10여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을 태워 거제도 등으로 안전하게 피난시켰다. 미군이 이들을 구제한 이유도 놔두면 북한정권이 이들을 집단학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서해에서도 백령도, 강화도 등 큰 섬들은 물론 작은 섬들에도 피난민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예를 들어 백령도는 당시 주민이 17,813명이었는데, 피난민 수는 62,082명이나 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국군이 떠나고 나면 반동분자 숙청의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³⁹⁾

2. 신천양민학살사건의 진실

북한은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할 당시 인민군이 행한 학살에 대해 미군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천학살사건이다. 북한의 주장은 이렇다. 해리슨 대위라는 사람이 이끄는 미군부대가 북진하던 중 35,000여 명의 신천지역 양민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신천박물관을 만들어 ‘미군이 톱으로 민간인의 머리를 자르는 그림’ 등 잔혹한 학살 자료들을 전시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해리슨이라는 이름의 미군은 존재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대위가 이끄는 중대급 부대가 그 정도의 대규모 학살을 주도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미군이 북진할 때 황해도 신천지역을 잠시 들렀을 뿐 전혀 작전을 전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당시 경험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미군이 38선을 통과한 것은 10월 9일, 평양에 도착한 것은 10월 19일이었다. 당시는 국군 1사단과 서로 먼저 평양을 장악하려 경쟁하며 정신없이 북진하느라, 신천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할 상황이 아니었다. 더욱이 당시 미군은 양민학살은 물론 항복한 북한군에게 사격을 가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런 내용은 백선엽 장군의 수기 <군과 나>에도 나와 있다.⁴⁰⁾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45-48.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48-49.

그러면 신천양민학살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북한정권이 후퇴를 앞두고 주민들을 예비검속하여 ‘반동분자 숙청’을 하라는 지시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황해도 도당은 1950년 10월 11일 북으로 철수하라는 명령과 함께 정치보위부와 내무서에 “반동들을 색출 검거하여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국방군(대한민국 국군 지칭)과 국제연합군(유엔군 지칭)에게 협력하는 자들을 말소시키고 도내 반적대, 구월산 학생 유격대 등 무장 반동들과 야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지시에 따라 황해도 신천내무서(경찰서)에서는 10월 13일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반동적인 유언을 퍼뜨리는 자” 등 5가지 해당자에 대해 색출 검거하는데 협력할 것과 이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총살할 것을 지시했다. 당일 선천읍과 각 면에서는 교수장, 총살장 등 사형 집행장이 설치되고 집단학살용 방공호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지역 공산당원들이 긴 칼과 죽창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엌, 헛간, 뒤주 등을 살살이 뒤졌다. 예비검속과 학살 열풍이 시작된 것이다. 13일 시작된 집단학살극은 황해도 신천군 뿐 아니라 인근 안악군, 재령군, 은률군, 송화군 등 모든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났다.⁴¹⁾

이러한 집단학살극이 일어나자, 재령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미군이 올 때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우익인사들이 10월 13일, 학살에 대한 반공 저항 운동을 일으켰다.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만 살겠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소… 더욱이 수륙만리 타국에 와서 피 흘리며 싸우는 연합군들을 더 대할 수 없을 것 아니겠소… 하여간 우리가 지금 학살당하는 애국 동지들을 목전에 놓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서 못 할 일이거니와 하느님 앞에서도 죄가 될 것이오.”라며 집단학살에 대한 저항운동에 나섰으나 인민군의 진압으로 실패하였다.⁴²⁾

재령 인근 지역인 신천에서도 10월 13일, 기독교인 등 우익인사들이 민간 유격대를 만들어 북한군의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 총, 낫, 죽창 등을 들고 저항운동에 나섰다. 이 신천 반공유격대는 며칠간 인민군과 교전하며 북한군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군 후퇴 후 치안대를 구성하여 치안권을 행사하면서 북한군 패잔병들과 학살에 연관된 좌익분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처단하는 등 학살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또 다른 민간인 학살극이 일어난 것이다.⁴³⁾ 이 때문에 신천 지역에서 유독 많은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40) 백선엽, 『군과 나』(시대정신, 2010), pp.126-127.

41) 한화룡,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 전쟁의 그늘』(포앤북스, 2015), pp88-92.

42) 한화룡,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 전쟁의 그늘』(포앤북스, 2015), pp93-94.

43) 신천지역 반공유격대는 중공군이 내려오자 치열하게 싸우다가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등지로 피난해 미군과 국군 소속의 유격대로서 수시로 황해도 지역에 침투하여 북한군과 유격전을 벌이곤 했다. 이로서 신천 등 황해도지역에는 쌍방간 피살자가 많았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3. 서울 수복 이후 남한 지역 빨치산에 의한 양민 학살과 토벌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과 서울 수복(9월 28일) 이후, 인민군은 북으로 후퇴했으나 퇴로가 막혀 남한 각지의 산악으로 들어간 패잔병들도 많았다. 이들은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 백운산, 회문산 등 남한 각지의 산악을 근거로 빨치산이 되어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북한군을 도왔던 남한의 좌익분자들 역시 그들을 따라 월북을 하거나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지리산 등 산악으로 들어가 북한군 패잔병들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하기도 했다.

비상경비사령부 정보처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한 각지에서 활동했던 공비(빨치산)의 규모는 약 6만 명에 달했다. 이는 남한 지역 내에서 대남 저항 세력의 규모가 엄청났음을 의미했다.⁴⁴⁾ 6·25전쟁 발발 당시 대한민국 국군 전체 규모가 9만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 지역의 산악에서 활동한 빨치산 규모가 6만이었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다.

11월 말 중공군이 개입하고 12월 들어 유엔군과 국군이 남으로 후퇴를 시작하자, 남한 각지의 산악을 근거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사기가 높아져 대남 투쟁활동을 강화했다. 당시 빨치산들은 산악을 근거로 활동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포섭하여 세력을 넓혔다. 이들은 밤이면 주민들을 협박하여 음식, 옷 등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학살로 보복 조치를 했다. 이러한 빨치산의 활동으로 인해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 공화국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정부에서는 후방에서 활동하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을 창설하고 빨치산 토벌전도 전개했다.

4. 거창양민학살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은 11사단 소속 부대가 지리산 주변 빨치산들을 토벌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었다. 1951년 2월 8일, 400~500명의 빨치산들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원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과 청년의용대 대부분을 사살하고, 10여명 만이 겨우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11사단 일부 부대가 빨치산을 토벌하러 신원면에 들어가자, 빨치산들은 산골로 퇴각했다. 이후 토벌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 빨치산들이 다시 신원면에 나타나 경찰을 위협했다. 이에 토벌대는 신원면으로 되돌아와 9일에서 11일까지 3차에 걸쳐 인근 주민들을 불러 모아 선별한 후 처형하였다.

이 사건은 토벌 부대원들이 흥분한 탓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공비(빨치산)이거나 공비

44)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9), pp311.

와 내통한 세력일 수 있다는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때 살해된 사람이 약 7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공비(빨치산)들이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공비토벌과정에서 지역주민 대부분을 집단적으로 처형한 것은 6·25전쟁이 남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어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고, 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경 대령은 무기징역, 3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징역 10년 등의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

거창양민학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군·경이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의 빨치산 협조문제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주민들이 산악을 근거로 활동하는 빨치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군·경의 진압을 방해하거나 빨치산들을 피신하게 해주는 역할도 했었다. 물론 빨치산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사람들도 많기는 했지만 말이다. 당시 빨치산 활동을 했던 비전향자 정관호의 “전남유격투쟁사”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대해 식량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빨치산을 도와주었고 뒷바라지해 준 인민들”이라며 고마워했다. 이런 이유로, 토벌하는 군·경(군인, 경찰)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토벌 과정에서 강경 진압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⁴⁵⁾

5. 국군의 빨치산 토벌 작전과 대응

북한군 패잔병들과 남한 좌익세력들로 이루어진 빨치산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상적 동지들이었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했고 전쟁 중 군수물자 수송 차단을 위한 철도 폭파, 열차 습격, 철교 폭파, 그리고 아군의 통신 방해를 위해 전선 절단, 전신주 파괴 등을 자행했다. 또한 형무소 습격, 경찰서 습격, 군 주둔지 공격, 미군 전투기 격추 등 온갖 무장투쟁을 자행했으며,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전방에서 전투가 소강상태를 보이던 무렵인 1951년 11월 25일, 정부는 백선엽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백야전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전주를 거점으로 하여 지리산 등 영호남 일대의 빨치산들을 토벌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규모는 정규군 3개 사단, 전투경찰 4개 연대 등 총 5만여 명에 달했다. “쥐잡기” 작전명의 공비 토벌 작전은 1951년 12월 2일에서 1952년 3월 14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951년 12월 한 달 동안 공비 약 4,000여 명을 사살하고 약 4,000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⁴⁶⁾

공비 토벌군사령관 백선엽 장군은 거창사건에서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지시를

45) 현대사상연구회,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1), 188-190.

46) 양영조·남정옥, 『알아봅시다! 6·25전쟁사(제3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114-115.

내렸다. ‘모든 예하 장병은 작전기간 중 부락 근처에서 숙영하지 말 것, 물 한 모금도 그냥 얻어 마시지 말 것, 식량은 여유 있게 지급되니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 저항하는 자 이외에는 절대로 쏘지 말 것’ 등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야 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다.⁴⁷⁾ 백선엽 장군은 죄를 지은 빨치산들은 쫓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가담자의 가족들은 최대한 구조하려 했다.

6. 양민 학살의 주도 세력과 그 원인

6·25전쟁 중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는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세력이 합세해 점령통치를 했고,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는 북한지역에 있던 우익세력 즉 반공세력과 합세하여 북한군에 대항했다. 다시 말하면 남한지역에서나 북한지역에서나 공산사상을 가진 세력은 동지로 뭉치고, 반공(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은 공산주의에 대항해 함께 뭉쳤다. 그러므로 6·25전쟁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과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간의 사상전쟁이자 체제전쟁이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학살의 책임이 있을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군과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합세한 공산주의세력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북한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했을 때, 학살은 주로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분자들에 의해 일어났다. 분노한 일부 우익세력들이 보복을 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적 보복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영광군 백수면의 한금례 씨는 6·25전쟁의 실상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공산당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잘못 걸리면 온 가족을 전부 죽였으니까. 운이 있으면 살고 운 없으면 죽고. 그 사람들 기분 내키는 대로 죽이고 살리고 했어.”⁴⁸⁾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당시에도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대량 민간인 학살의 주범은 북한정권과 북한지역내 마을의 좌익분자들이었다. 황해도 신천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국군과 유엔군 점령기에 피해를 입었던 우익세력에 의한 보복조치도 있었지만, 북한정권이 광범하게 자행한 집단학살에 비교할 바는 아니었다. 함흥에서 시체발굴 단원으로 활동했던 김인호 씨는 동굴 속에서 죽은 수천, 수만 구의 학살당한 시신들을 처리하면서 꿈인가 생시인가 꼬집어 보기도 했고, “왜 공산당 빨갱이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가?”라고 스스로 반문했다.⁴⁹⁾

그러면 왜 공산주의자들은 민간인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을까? 학살의 이유와 근거는

47) 백선엽, 『군과 나』(시대정신, 2010), pp268.

48) 월간조선사, 『6·25피살자 59964명』(월간조선사, 2003), pp23.

49) 김인호, 『릉라도 여관』(경지출판사, 2016), pp192-193.

뭘까?

공산세력이 반공 우익세력을 잔인하게 학살한 이유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등 공산주의 사상은 평등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 계급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피를 흘리는 내전이 일어난 것이다.

프랑스 학자들이 만든 “공산주의 흑사”에 따르면 1917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이래 1991년 소련이 멸망할 때까지 70년간의 공산주의 역사에서 피의 숙청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공산주의에 의해 학살당한 규모는 약 1억 명 이상으로 보았다. 그 중 구소련은 2,000만 명 이상, 중공(모택동)은 6,50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북한 20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리카 1,500여만 명 등으로 산정했다.

이렇듯, 6·25전쟁에서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세력이 학살의 주범이었던 이유도 바로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I. 마무리

6·25전쟁은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공산세력과 반공 자유민주세력 간의 사상전, 체제전쟁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6·25전쟁을 이해해야 전쟁 와중에 있었던 수많은 민간인 학살문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6·25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공산주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 김일성이 남침한 것도 공산주의이론에 따라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때문이며, 북한군과 좌익세력이 우익세력을 ‘반동분자’로 몰아 잔혹하게 학살했던 것도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한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있었기에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은 사람을, 그것도 친한 이웃을 죽이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6·25전쟁 시 마을에서 일어난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통해 배우는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민을 둘로 나눈 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좌파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우파들을 박해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문정권은 2017년 5월 집권 후 국민을 좌파와 우파로 둘로 나누고 좌파세력을 촛불혁명이니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우대하고 우파세력에 대해서는 보수세력이니 적폐세력이니 하면서 매도하며 학대했다. 문정권 주도세력은 수시로 “보수세력, 불태워야 한다”, “궤멸시켜야 한다” 등으로 보수국민을 적폐로 몰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원외당협위원장과의 오찬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촛불민심만 생각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문정권은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국민을 양분했는데, 이를 읍면동 마을까지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3,49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도권을 마을 좌파세력이 장악하도록 하고, 우파주민들을 강력히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6·25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이 한결같이 주민자치기본법의 내용을 보고는 6·25전쟁 당시 인민위원회 같다고 우려하는 것이다.⁵⁰⁾

“Freedom is not free”라는 명언처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인지 깨달았으면 한다. 6·25전쟁의 사상전, 체제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의 실체와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다.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국민들 앞에는 줄다리기 게임의 두 줄이 놓여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냐?”, “사회주의체제냐?”의 체제줄다리기인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선택할 체제가 있는 줄 아는데, 실제 제3의 줄은 없다. 두 줄밖에 없다. 왜냐? 현재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주의세력의 주류가 주사파이기 때문이다. 주사파란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6·25전쟁 과정에서 직면했던 체제전쟁 상황으로 되돌아 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체제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유권자 각성운동 뿐이다.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유권자 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공산주의 왜 위험한가”, “문재인정권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허물기” 등의 실체를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작업이다. 유권자를 각성시키는 국민운동만이 사회주의로 달리는 대한민국 열차를 정지시키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각성되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체제이기 때문이다.⁵¹⁾

50) 이희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도서출판 대추나무, 2021), pp118.

51) 이희천,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도서출판 대추나무, 2001), pp10.